

2003.12.17(水)

# 檢討報告書

(第125回 定例會)

達城郡議會  
專門委員 文乙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당직근무수당은 매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근 거

-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행정자치부 재정과 842호, 2003. 7. 24)

### 3) 주요내용

-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4. 검토보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p17에 의함
  -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함으로
  -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토록 제시되었음.
- ※ 대구시 타 구
  - 일·숙직 : 30천원(토요일 : 40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와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감히 감면 축소 하였으며, 목적세 및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근 거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를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로 개정함.  
(안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안 제4조)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5호)
- 상업용 문화재도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주거용 부동산 및 건축물”을 “부동산 및 건축물”로 감면을 확대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법명을 개정하고,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명을 개정함. (안 제11조 제3항)
-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2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문을 전면 개정함.(안 제16조)

-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 기간을 “5년간”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 조정  
함.(안 제17조)
-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8조)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외  
의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함.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수익사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안 제22조)

#### 4. 검토보고

-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에 의거 정비
  - 소외계층 감면 연장
  -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축소
  - 목적세 및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

- 개정조례안 제2조~제3조 내용은 용어 개정임.
- 개정조례안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내용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재산세와 종토세는 현행대로 면제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50% 경감으로 축소
  -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던 것을 50% 감면 축소 개정은, 국가 또는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종교단체 의료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유료양로시설,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개정조례안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 자료 또는 미  
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9)

-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개정조례안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주거용부동산 ⇒ 부동산으로 확대감면

- 문화재 보호구역은 주거용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해 주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주거용부동산 외 (상업용)부동산도 감면대상  
에 포함 (예 : 안동하회마을)

-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 제6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 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개정조례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주택법 제10조(공동사업주체) 제3항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  
로 본다” 법령개정

- 2세대 ⇒ 국내에 2세대로 개정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등)
  - 제1항제1호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50년 (영구임대주택)
  - 제2호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30년(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을 세제감면 추가대상으로 개정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으로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 하므로 영구임대주택(50년)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11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률명을 개정함.
- 법제28조의2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등)
- 법제28조의5 (아파트형 공장예의 입주)

○ 개정조례안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마을회 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으로서
-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1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은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함.
- 개정조례안 제1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재산세 5년간 3/1000 세율적용 ⇒ 3년간으로 단축
  -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단축 조정함.
- 개정조례안 제1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3년간 세제 경감기간을 연장함.
  - 2003. 12. 31까지 ⇒ 2006. 12. 31까지
- 개정조례안 제19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수도권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 현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수도권 구분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감면 혜택
  - 개정
    - 수도권 구분 중 “과밀억제권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외 수도권 구분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함.

이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22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축소 개정함.
- 농업기반공사는 수익사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세를 50% 축소하는 것임.

○ 부칙

- 적용시한 ⇒ “2003. 12. 31”을 “ 2006. 12. 31”로 3년간 연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3호)이 개정('02.2.24)·시행('03.7.1)되어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2) 근 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기보증금)

## 3)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회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
-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자가 비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

#### 4. 검토보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2. 2. 4 법률 제6653호) 및 환경부의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기 보증금)에 의거 비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며
  - 전자제품 판매시 포장재를 무상회수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
- 2004. 1. 1부터 시행

#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금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6653호)이 개정('02.2.24)·시행('03.7.1)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시달('03.9.3)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근 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3) 주요내용

-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  
(안 제8조제1안)

-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8조제3항)
-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커피 무상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안 제10조제2항)
-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함.

#### 4. 검토보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그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2004.1.1부터 시행)
- 대구광역시달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본 조례 내용을 별도 제정하는 것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8조(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 제1항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밖의 업종”이라 함은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본 조례 제정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아울러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임.

○ 조례안 제1조(목적)

○ 조례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1”의 기준에 의거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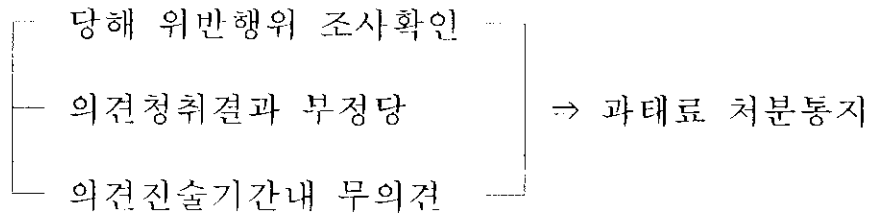
○ 조례안 제3조(의견진술)

-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을 하고자 할 시 ⇒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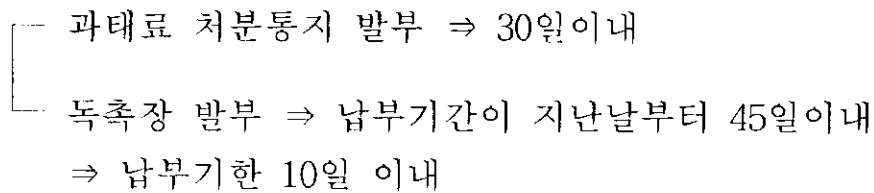


○ 조례안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 과태료 처분을 할 시



- 과태료 납부기간



-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  
 ⇒ 즉시 취소 또는 변경 ⇒ 피처분자 통지

○ 조례안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과태료 처분에 불복자 ⇒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제기
- 이의신청 제기된 때 ⇒ 관할법원 통보 ⇒ 이의제기한 자에게  
 통지

○ 조례안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사항을 기록, 관리

○ 조례안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별표1”과 같음

○ 조례안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 과태료 부과 ⇒ 위반  
 회수 불구하고 1차 과태료 부과

- 같은날, 같은 장소, 같은 위반행위 과태료 ⇒ 1회만 부과
-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기간내 과태료 납부 ⇒ 50% 감액부과

○ 조례안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 커피 무상제공 행위
-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등에서 A4 규격 또는 1,000cm<sup>2</sup> 이하의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 조례안 제10조(신고자)

-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가능
- 같은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 ⇒ 2인이상 신고자의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봄

○ 조례안 제11조(신고방법)

- 신고자는 위반행위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 ⇒ 문서(우편포함) 또는 방문신고
- 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 또는 물품 등을 제출

○ 조례안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 위반행위 입증 곤란한 경우 ⇒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반려, 신고자 동의하에 폐기

○ 조례안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위반사업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 발송
- 위반사업자 ⇒ 10일 이내 사실확인 제출

-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 14일 이내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  
포상금 지급
- 조례안 제14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 신고자의 실명계좌 입금 원칙
  - 위반자가 위반행위 인정시 ⇒ 과태료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
- 조례안 제15조(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
  - 제9조 해당자(자동판매기, 소형종이봉투)
  -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 초과
  -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에 단속된 경우
  - 타인의 영업을 방해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조례안 제16조(신고자의 보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불가
- 조례안 제17조(신고 포상금의 조달)
  - 군예산 편성

##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2.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사육신의 위폐를 봉안한 육신사를 비롯하여 보물 554호 태고정 등 다수의 문화재와 전통가옥이 산재되어 있고 관광객을 위한 「CITY TOUR」가 운행중인 하빈면 묘골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테마개발을 통해 도시민에게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위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

###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3) 주요내용

#### ○ 매입

- 지번 : 하빈면 묘리 741-1, 741-7, 701번지
- 면적 : 2,519m<sup>2</sup>(762평)
- 매입가격 : 71,843천원

### 4. 검토보고

○ 하빈 묘리 일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임.

- 매입코자 하는 재산

- 하빈면 묘리 741-1, 741-7, 701 (3필지)
- 답 2,519m<sup>2</sup> (762평)
- 매입가격 : (공시지가) 71,843,500원
- 2002년 2회추경 : 257,000천원(교부세)